

# 정부 “일본산 수입 수산물, 더 깐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사”

### 오염수 대응 일일브리핑… “수산물 안전성 염려 안해도 돼” “방사능 물질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 반입 원천 차단”

정부는 27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차와 관련해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 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박우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식탁 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일본산 수산물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수산물에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8개 핵(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에서 생산된 것인지 서류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 보관창고를 방문해 수산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현장검사를 통과한 수산물은 마지막 단계인 정밀검사(방사능 검사)를 받는다.

박 차장은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

(0.5Bq/kg 이상)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며 “증명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밀검사는 수산물을 작게 잘라 고르게 분쇄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통해 1만 초(2시간 47분) 동안 방사능 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 차장은 “전처리는 수산물 어느 부위가 오염됐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료를 균질화하는 작업”이라며 “전처리와 방사능 검사를 마친 수산물은 잘게 분쇄돼 상품 가치를 잃으므로 모든 개체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CODEX는 식품 통관검사 시 난수표에 따라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이 방식을 따른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정전협정 70주년... 유엔군 위령탑 묵념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방문,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취약계층 보호·야외 작업시간 조정” 한총리, 폭염피해 예방 조치 긴급 지시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관계부처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라”며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양산대여소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그는 특히 “재난 문자, 전광판,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상세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야외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특고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폭염에 따라 도로 시설물과 철도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긴장감이 끝이 났다”며 “정부는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현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장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와 함께 피해도 컸다”며 “재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완벽히 작동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민간자율형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최근 고용동향과 고용정책 추진상황 ▲제2차 심년형관질관리 종합계획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회의 내용과 관련,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단지 노후화·집적화로 인한 화재·폭발과 함께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안전 노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한 기업에 의무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기·가스 분야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기현 “특별재난지역 최대한 폭넓게 지정되도록 하겠다”

### 새만금서 전북 현장 최고위

### “호남서 인정반도록 최선 노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지역(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우선적으로 돼 있지만, 아직 덜 된 지역들이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 회복, 보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국가 차원의 철저한 치수 관리를

잘해서 기상 이변에도 정말 걱정 없는 자연재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며 “내일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보다 항구적인 자연재해 안전대책, 치수 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제일 많이 방문한 곳이 호남인 것 같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자주 내려오고 현안을 챙기고 현장 민심을 듣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앞으로 그 애정을 계속해서 쏟아부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서 국민들로부터 ‘불매’(불수용 매력 있는 사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당이 호남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예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찾아왔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지난달 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고 “새만금지역의 발전과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전북이 대표적인 산업 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도 했다.

그는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돼 지금까지 총 8조1000억원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 그중 80%가 넘는 6조6천억원 규모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와 투자를 높이겠다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새만금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野 “지명철회·자진사퇴 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불발됐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재승부 시한인 이날

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보고서 채택을 최종 거부했다.

민주당 외무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과욕을 버리고 ‘개인 유튜브’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재승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가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전남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남소재 중소기업 면접자
  - \* 중소기업 기준 : 근로자수 5인이상 300인 미만
- 워크넷 유효구직자

### 지원내용

- 1인당 1회 50,000원 최대 2회 지급
- 같은 날 다수의 기업 면접시 1회만 인정
- 동일기업에 2차 면접시 1회만 인정
- 한 기업당 최대 연 20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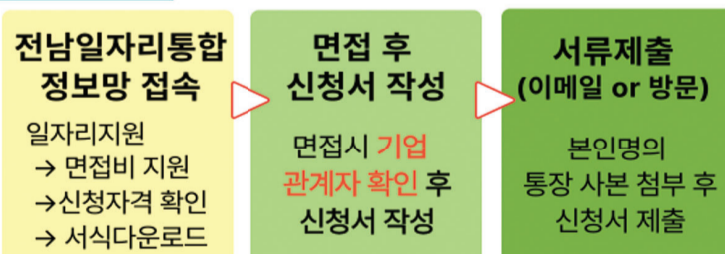
### 신청기간

- 면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사업기간

- 공고일(2023.2.23.)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방법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 제출처

- 이메일 : jnjob@naver.com
- 방 문 :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1층)



문의 : 061-750-7700